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재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을 무렵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앙지법 417호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영광의 노무현' '치욕의 박근혜' 잇달린 운명의 날

### 노 추도식 대통령·여권 집결...정권교체 신고식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첫 재판...수감찬 채 호송

'9년만의 정권교체에 희열에 찬 김해 봉하마을', '재판정에 피고인으로 모습을 드러낸 박근혜 전 대통령'. '5·9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지 2주만인 23일 노무현·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운명이 엇갈렸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열린 김해 봉하마을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 신분으로 추도식장을 찾는 등 축제분위기에 휩싸였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데 이어 뇌물혐의 재판을 받기 위해 수감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린 뒤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고인 신세로 전락했다. 이날은 노 전 대통령에게는 하늘에 서나마 서거 8년만에 정권교체 기쁨을 맛본 환희의 날이 된 반면, 박 전 대통령에게는 치욕으로 기록된 날이 됐다. 두 전직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소추

안 가결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았다는 공통점도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은 탄핵기각으로 복귀한 반면, 박 전 대통령은 인용으로 최고의 권좌에서 물러났다. 이런 상황 탓에 두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정치권의 표정도 확연히 엇갈렸다. 민주당은 문 대통령을 정점으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김해 봉하마을의 8주기 추도식장에 총집결했다. 2007년 대선참패 이후 스스로 '폐족'임을 선언한 진노(진노무현)를 포함해 민주당의 화려한 부활을 확인하는 장이자 9년 만의 정권탈환에 성공한 문 대통령의 '당선신고식'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반면, 한국당의 표정은 침뿜함 그 자체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으로 불명예 퇴진한 데다 뒤이은 대선에서도 패배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당은 봉하마을 추도식에 당대표 대신 박맹우 사무총장을 보냈고, 당차원의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에 대해서도 공식 논평없이 침묵했다. 문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의 역점정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지시한 이후 또 다른 전직 대통령인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새삼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리는 분위기다. 청와대는 성급한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감사가 주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대한 감정의 양극 탓에 '정치감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지우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09년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받던 도중 극단적 선택을 한 것에 대한 보복처분 아니냐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열 전 대표는 "오늘은 대통령의 날? 문재인 대통령은 친구 노무현 대통령을 감격 방문. 노무현 대통령은 영광의 8주기, 박근혜 대통령은 치욕의 법정에서 선다"며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음미한다"고 존경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 민주 "못이룬 꿈 실현...사람 사는 세상 완성" 국민 "특권없는 사회"·정의 "꿈 이어 가겠다"

### ■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정당별 다짐

더불어민주당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8주기인 23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통해 노 전 대통령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춘추관장을 지낸 김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 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 전 대통령의 어록을 인용, "국민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시대를 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임종철한 1,700만 국민은 정의·인권·민주주의가 우선하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촛불을 들었고, 기어이 불의의 시

대를 종료하고 대한민국 역사를 새롭게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외환위기 극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리더십과 노력을 계승하고 노 전 대통령의 통합의 리더십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공정·정의가 살아 숨 쉬는 나라, 국민통합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재탄생시키겠다"며 "노 전 대통령의 못다 이룬 꿈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우리 정치권은 더 많이 국

민과 소통하고, 반칙과 특권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뜻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 전 대통령은 탈권위주의와 소통의 리더십으로 기억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당은 "노 전 대통령이 이루어 했던 반칙과 특권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고연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노 전 대통령 서거 8주기를 추모한다"며 "노 전 대통령이 이루어 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지역차별이 없는 사회가 아직도 요원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모든 국민이 '노무현이 꿈꾼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장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의당은 노무현과 전태일의 꿈을 이어 가겠다"며 "사람이 사람답게 존중받는 세상을 향해 강물처럼 흘러가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강병은 기자

## "4대강 사업 수량확보는 의미...수질은 악화" 이낙연 "4대강 감사결과 정부 따라 달라져 쓸쓸"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4대강 사업과 관련, "수량의 확보와 자전거기, 이 두 가지는 의미가 있었는데 수질은 나빠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을 만나 "대통령 지시에 총리후보자가 어떤 입장이 있겠나. 필요한 일이나 결정하신 게 아니겠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자전거기일이 도모했다는 이야기를 잘 받아들여 주기 바란다"며 "오



죽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나. 잘 해석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느 것이 본질인가를 생각해 보면 자전거기일은 본질이 아니다"며 "수질문제를 (자전거기과) 동일선상에 놓고 긍정적이었냐고 말하면 실망스럽다"고 덧붙였다. '수질과 수량 중에 무엇이 본질이나'는 질문에는 "수량도 고려사항이지만 수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3차례에 걸친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감사가 정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게 몹시 씁쓸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2009년 12월 국회 농업수산물품질위원회를 시찰 민주당이 4대강 사업으로 분류해 대폭 삭감을 요구한 농업용저수지 등 높이기 사업을 정부 안대로 4,066억원 모두 통과시켰다. 이 후보자는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단이 곧 나온다. 법원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그런 대전제 하에서 갈등을 완화하거나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은 기자

## 국민의당, 8월 전당대회 열고 지도부 선출

### 25일 중앙위서 비대위 구성...'제로베이스서 시작'

국민의당은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고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기로 했다. 고연호 대변인은 23일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한 다음 8월에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은 앞서 알려진 대로 오는 25일 오후 3시 중앙위원회

를 열고 확정하기로 했다고 고 대변인은 전했다. 고 대변인은 "오늘 당무위에서 중앙위 명부를 확정하고 중앙위 소집을 의결했다"며 "25일 중앙위 폐회 직후 당무위를 다시 소집해 중앙위 결과를 추진하고 비대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대위원장은 추대행실이 될 것"이라며 "선거를 하려면 시간이나 절

차 등 물리적으로 제약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 대변인은 "오늘 당무위에선 비대위원장 후보군에 대해 아무 언급도 없었다"고 전하면서 "비대위원장으로 가장 유력했던 주승용 의원이 고사한 만큼 원내외를 망라해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교동계 원로들의 탈당조짐이 있는 나라는 질문에는 "동교동계 여론들 말씀은 기본적으로 당 노선을 지키면서 야당역할을 제대로 하라는 주문"이라며 선을 그었다. /서울=강병은 기자

## 국정기획위, 오늘부터 22개 부처 업무보고

### '일자리 추경' 최우선...정책개선·공약이행 점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정기획위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회견에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런 계획을 밝혔다. 첫 업무보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받기로 했다. 기재부는 오전 7시 30분 경제1분과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다. 24일에는 기재부에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경제2분과),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사회분과), 행정자치부(정치·행정 분과), 외교부(외교·안

보 분과)의 업무보고가 진행된다. 기재부가 첫 업무보고를 맡게 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일자리 추경 예산 등을 두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 위원장은 "기재부가 전체를 총괄하는 업무가 많고, 또 당장 일자리 추경에 산동 시급한 문제도 있어서 업무보고를 먼저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튿날인 25일에는 금융위원회의 경제1분과 업무보고로 일정을 시작한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경제2분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사회분과), 법무부(정

치·행정 분과), 국방부(외교·안보 분과) 등의 업무보고가 25일에 진행된다.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 첫 업무보고를 하며,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경제 2분과), 환경부와 문화체육관광부(사회분과), 국민안전처(정치·행정분과), 통일부(외교·안보분과)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중기청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벤처부로 승격을 약속한 바 있어 이번 업무보고가 더욱 눈길을 끈다. 아울러 국민안전처 등 정부조직개편의 대상 부처로 지목되는 곳들이 업무보고에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이날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국가정보원 역시 사흘 안에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김 위원장은 전했다. /연합뉴스

**[무단] 횡단**  
당신의 마지막 발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TSS 교통안전공단